

文대통령, '사람중심의 경제' 방향 제시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일자리 경제이자 공정한 경제... 혁신성장 통해 지능정보사회 전환 이끌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문헌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5분부터 15분간 워싱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며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진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 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여타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중요성에 공감해 그동안 단절됐던 노사정 대화 채널도 복원되고 있다"며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라며 "모든

경제주체에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경제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근절할 것"이라며 "진입장벽·가격규제 같은 경쟁 제한적 요소도 재점검 해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람중심의 경제'의 또 다른 축은 혁신성장"이라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적자원은 한국경제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량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성장세가 가장 빠른 동아시아 지역의 관문이고 미국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이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은 미래의 변화에 발 맞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모이재! 대한민국 국회와 함께하는 2018 평창 성공 개최 플래시몹' 행사에서 황영철 국회의 평창올림픽 지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및 참가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반다비, 수호랑과 함께 공연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

대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역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성장세가 가장 빠른 동아시아 지역의 관문이고 미국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이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은 미래의 변화에 발 맞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경제협력력이 그동안 상호간 교역과 투자확대를 넘어 세계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인 여러분들이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이다. 나는 이번 미국 방문이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과의 만남이 양국 경제계 간의 우호와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세월호 내 침수기록물 복원·판독 가능할 듯

국가기록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세월호선체 조사위원회'가 선체수색과정에서 발견해 1차 감정을 의뢰한 기록물의 보존·복원과 판독 가능성을 확인했다.

29일 국가기록원과 국과수에 따르면 선체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기록물은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정밀 보존·복원처리 작업을 완료한 뒤 국과수에서 특수 광학장비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관측하는 절차로 내용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에서 1차로 보존·복원처리를 완료한 기록물은 (2점 약42매) 4월말 발견된 것으로 3년동안 바닷물에 침수된 상태다. 종이가 부풀고 강도가 매우 약해져 있어 손으로 만지거나 날카로운 분리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국가기록원 등은 추가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바다 펄·염분 등 오염제거, 날카로운 분리·건조, 재질 접합·강화 등의 보존·복원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종이는 한 장씩 분리할 수 있었고, 희미하지만 볼펜 등으로 기록된 내용이 일부 남아 있는 것도 확인했다.

또 현재 국과수에서는 보존·복원된 기록물의 지워지거나 희미하게 바래 보이지 않는 문자가 기존 어떤 문자였는지를 확인하는 불명문자 판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 디지털·광학장비 등을 이용한 다양한 판독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1차 감정을 판독 결과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관련 내용 공개 등의 조치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전했다.

복원처리와 판독 결과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견된 기록물도 복원과 판독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우선 1차로 복원처리과정을 거쳐 판독된 기록물은 주로 수화여행 관련 학교 유인물 등으로 확인된다.

국가기록원과 국과수는 "세월호에서 수습된 기록물에 대한 복원 등을 적극 지원해 기록유류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온전한 상태로 유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상곤, 논문 표절 의혹 '부적절한 주장' 반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또 "당시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발언하며 야당의 공격에 강하게 대응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문 49편 중 15편, 30.6%가 중복 게재나 표절'이라고 지적하자 "부적절한 주장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해명 과정에서 서울대연구실실사위원회의 앞서 김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박사 논문의 26.4%가 표절'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대연구실실사위에서 최근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용 표시나 출처 표시는 지금의 시집에선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행 문단이나 후행 문단에 다 나와 있고, 그런 점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서울대연구실실사위) 판단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석사학위 논문 130여편을 표절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그는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썼다. 그것도 포괄적 인용까지 포함해서 인용과 출처 표시 등을 다 했다"며 "그래서 전혀 표절과는 관계없다"고 단언했다.

이중배 한국당 의원이 "베끼기 수준의 논문을 갖고 가짜 인생을 살았다. 물러나라"고 맹비난하자 "제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 쓴 것이며 당시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철저하게 썼다"고 재차 항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기에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당, 문준용 제보 조작 "대선 공작 게이트"

추미애 "선거 개입"... 박완주 "안철수 사과해야"... 이상호 "검증 안 한 것 이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민의당의 '문준용 제보 조작'을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국민의당 지도부와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촛불대선이었으며 국민 회복을 위한 촛불 정권이 선거를 만든 것이다. (의혹 조작 사건은) 촛불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과 유사한 것 아닌가. 국민의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 해야 할 것"이라며 "당시를 상회해 보면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이었다. 그것을 조직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엄청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안철수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민주주의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는 점을 공당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차원의 책임론에 대해 "개

인 문제인가, 조직 전체적 문제인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거를 하고 국민들한테 현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국민 정서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당시 대선 후보였고, 대선 선거운동본부에서 연일 조작된 부분을 가지고 공격했고 박준용 비대위원장이 사과했지만 최대 수혜를 볼 대선 후보의 사과가 어찌어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상호 의원은 국민의당의 검증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보가 왔다고 하면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는 안 해도 실명을 확인하고 당 관계자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 녹취록만 보고서는 안 한다"며 "그런 검증을 안 하고 (의혹 제기)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당의 문준용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렇게 말씀하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조작했으면 의혹이 아닌 것이지, 자신들이 조작해놓고 의혹은 여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나"고 반박했다. /뉴시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